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말하기*

Politics of the Atmospheric Commons Seen through Movements
agains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n Korea:
Speaking the Space of Flow and Invisibility

안새롬** · 윤순진***

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커먼즈를 이용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관리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려는 연구 풍토로 인해 대기 커먼즈 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커먼즈를 정치적 과정이자 산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커먼즈 정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대기 커먼즈 정치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기·기후 운동으로서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을 살펴보고, 각 대기·기후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를 발화한 맥락, 발화한 주체, 상정한 커먼즈 권리 공동체,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 대기에 계급, 도시 관리, 국민 국가, 인정의 정치 등 정치적 과정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이고, 대기 커먼즈를 통한 탈영토적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 이 논문은 윤순진의 지도로 안새롬이 작성 중인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다. 논문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2020년 (재)숲과나무 포럼 생명자유공동체에서 '커먼즈의 전환 정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논문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의견과 중요한 논의거리를 제안해주신 생명자유공동체, 서울대 환경에너지연구실, 익명의 세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의 수행과 논문 게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7S1A3A2067220)과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박사과정(me2th@snu.ac.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4단계 BK21사업(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양성사업단) 사업단장,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환경계획연구소 겸무연구원 (교신저자, ecodemo@snu.ac.kr).

주요어: 대기 커먼즈,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커먼즈 정치

1. 들어가며

대기에 배출된 먼지, 중금속,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오존(O₃) 등 각종 물질들은 좁게는 국지적인 대기 상태부터 넓게는 기후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이나 삶의 재생산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깨끗한 대기가나 안정된 기후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삶은 질이 저하되거나 심각할 경우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라는 장치를 통해 가상 시장에서 대기를 사고파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대기는 결국 모든 이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하는 공동의 것, ‘대기 커먼즈(atmosphere as the commons)’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uck, 1998; Torres, 2001; 윤순진, 2002; Bollier, 2004; 2014).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대기를 더 많이 이용할 권리가 없고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윤순진, 2002)는 의미에서 대기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비판하고 대기를 공동으로 관리할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였다.

그러나 커먼즈를 이용과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제도와 규칙을 연구하는 풍토로 인해 대기 커먼즈의 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커먼즈 상황에 놓인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관리 제도를 탐구하는 동안 누가 어떤 의미로 그것을 커먼즈로 규정하는지, 커먼즈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과정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 커먼즈에 대한 공동의 권리는 수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과 서사로 채워지는지 등은 중요하게 질문되지 않았다. 이러한 질문들은 커먼즈를

이용·관리 대상보다는 정치적 과정이자 산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커먼즈 정치(politics of the commons)의 질문들이다.

커먼즈 정치란 커먼즈를 특정한 내용과 방식으로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커먼즈 정치의 양상과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커먼즈가 규칙, 규범, 제도 등을 활용한 관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키기에 중요하다. 또 커먼즈의 성격이나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체는 자명하거나 미리 주어져 있지 않고 일정한 종류의 실천을 통해 구성되며, 커먼즈를 구성하는 과정은 사회문화적 변동을 동반한다. 이처럼 커먼즈를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면서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이자 산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먼즈 정치가 면밀하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정영신, 2020).

이 연구에서는 대기 커먼즈 정치를 탐색하기 위해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을 살펴보았다. 대기 중의 각종 물질들(중금속, 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매개로 부상하는 대기·기후 운동은 독특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대기가 커먼즈로 발화되고 구성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살펴본 사례는 1970~80년대 반공해(反公害) 운동, 2000년대 초반 블루스카이(blue-sky) 운동, 2010년대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youth) 기후 운동 등이다.¹⁾ 각각은 대기 중 공

1) 이 글에서는 청년(youth)을 청소년과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청년과 청소년은 주로 출생 시기나 학교 제도를 기준으로 구분되곤 한다. 예컨대 청소년은 10대로, 청년은 20~30대로 보는 방식, 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생 이상으로 보는 방식 등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청년 기후 운동에서 청년(youth)이란 젊은 사람(young people)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칭하는 연령대가 모호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15~24세 정도의 젊은 사람들에 의한 기후 운동을 청년 기후 운동으로 보고했고(UNFCCC, 2020.8.12), 한국에서 청년 기후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은 10대부터 30대까지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을 특정 연령대의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청년으로 범주화한 집단으로 본다. 이는 청년을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주의적 세대 규정이 같은 시기에 같은 경험을 한 일군의 사람들을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집단으로 환원시키고, 연구자들이 임의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론적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선기, 2016).

업 부산물,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매개로 특정 시민 단체들이 조직되고 운동이 수년 간 지속되면서 고유의 논리가 형성된 사례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대기·기후 운동에서 누가 어떤 맥락에서 대기를 커먼즈로 말했는지, 대기 커먼즈에 권리를 갖는 공동체는 어떤 범주와 내용으로 상정되었는지,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는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대기 커먼즈 정치 분석은 커먼즈를 ‘자원’이라 일컬으며 단지 이용과 관리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자원 관리 제도를 고안하는 연구 풍토를 성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기 커먼즈 정치는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 대기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가 각인되어(inscribed) 있음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²⁾ 나아가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해 커먼즈의 문제가 형성되고 바로 그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연구는 대기 커먼즈 정치가 가지고 있는 탈영토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영토 정치에 간혀 근대 주권과 공동체 틀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범주의 정치 공동체와 커먼즈 정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이론적 틀: 커먼즈 정치

커먼즈는 공동의 것을 지칭하지만 그 이상의 정치적 잠재력을 가진 개념이다. 근대화와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된 울타리 치기(enclosure)는 사람들이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빠른 속도로 분할, 상품화했다. 자본이 지역과 국가,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서 심화된 형태로 새로운 울타리 치기(new enclosure; Federici, 2010)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2) 브라이언트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대기에 “각인되어(inscribed)” 있다면서 대기의 물질적 조성과 대기질 변화를 추동한 정치 분석을 요청했다(Bryant, 1998: 89).

커먼즈는 공동의 것이 국가나 자본, 혹은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공동의 것을 되찾는(reclaiming) 실천들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공동의 것이 사라지지만 한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 공동의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볼리어, 2015; Bollier & Helfrich, 2019). 커먼즈는 공동의 것을 새롭게 창출하고 재구성하는 광범한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³⁾

또한 커먼즈 논의는 위기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하는 기능을 했다. 오스트롬(Elinor Ostrom) 그룹의 공동체 자치 관리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를 적용한 연구들은 공동의 것이 사라져가는 흐름 속에서 공동체 자치 관리 모델이 공동의 것을 유지하고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오스트롬, 2010). 오스트롬 그룹을 따르지 않더라도 많은 커먼즈 연구들은 다양한 영역과 규모에서 커먼즈를 발견하고 커먼즈를 위기 속 대안 모델로 위치시키며 커먼즈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관리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탐구했다(우자와 히로후미, 2008; 볼리어, 2015; Bollier, & Helfrich, 2019; 카프라·마테이, 2019). 이를 통해 공동체의 존속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분할·상품화되지 않는 시스템, 공동체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공동의 발전에 필요한 커먼즈가 유지·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왔다.

그러나 커먼즈 연구들은 단일한 지향과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각이

3) 커먼즈를 만드는 실천(communing)은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사라지거나 변형된 커먼즈를 되찾는 실천, 새로운 커먼즈를 창출하는 실천일 뿐만 아니라 커먼즈 자체에 내재된 실천이기도 하다. “커먼즈를 만드는 실천 없이 커먼즈는 존재할 수 없다(There is no commons without communing)”는 말처럼(라인보우, 2012; 볼리어, 2015), 커먼즈는 커먼즈를 만드는 공동의 인식과 규칙, 관행 등에 의해서만 커먼즈로 존재할 수 있다. 즉 커먼즈를 만드는 실천은 새로운 현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을 통해 커먼즈가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이미 거기에 주어진’ 커먼즈 대신 커먼즈가 구성되는 과정을 조명하는 개념이다. 커먼즈의 구성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늘 커먼즈의 재구성을 의미하므로 이 글에서는 커먼즈 구성과 재구성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았고 가능하면 ‘커먼즈의 구성’이란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따르는 이론적 전통과 계보에 따라 커먼즈를 정의하는 방식이나 주요 관심사, 연구 질문 등은 상이하게 설정된다. 그중에서도 객관주의, 신제도주의를 토대로 커먼즈 관리 제도를 연구하는 흐름,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을 토대로 커먼즈 정치를 연구하는 흐름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진다(정영신, 2016, 2020). 두 연구 흐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다른 관점으로 커먼즈에 접근한다.

커먼즈 관리 연구의 전제는 커먼즈를 정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커먼즈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감소성(subtractability)을 가진 자원으로 정의된다(오스트롬, 2010). 자원의 물리적 속성이나 자원이 놓인 객관적 상황에 따라 커먼즈가 정의되고 나면 커먼즈 상황에 놓인 자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명하게 된다. 주로 논의되는 문제는 커먼즈를 이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혼잡, 무임승차, 과도·과소 이용 등이다. 이러한 커먼즈 정의와 문제 설정을 공유하는 연구들은 커먼즈가 어떤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성공적인 커먼즈 관리 사례, 커먼즈 관리의 원칙·원리에 관심을 갖는다. 바다 커먼즈를 예로 들면, 바다를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관심을 둔다. 어획량, 어획 시기, 이익의 분배, 처벌 등에 대한 어촌 공동체의 제도, 국제 협약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같은 제도가 바다 커먼즈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바다 커먼즈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반면, 커먼즈 정치 연구는 커먼즈 상황이라는 연구의 초기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커먼즈를 규정하고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커먼즈가 정의된다는 전제 하에 그 과정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진다. 즉, 무언가를 공동의 것으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커먼즈 구성 과정(commonisation)과 공동으로 향유할 수 없게 만드는 커먼즈 탈구성 과정(decommonisation) 사이에서 커먼즈가 어떻게 규정되며 만들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Nayak, Berkes, 2011; 정영신, 2019). 가령 바다 커먼즈는 해녀들에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수산물 채취권이 보장된 ‘우리’ 바다이지만 수중 레저 활동을 하는 스쿠버다이버들에게는 누구나 접근할 권리가 있는 ‘모두’의 바다다(정

영신, 2020). 해녀 입장에서 바다 커먼즈는 역사적,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의해 구성되지만 모두의 바다를 주장하는 스쿠버다이버들에 의해 탈구성된다. 반면 스쿠버다이버에게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는 우리의 바다라고 주장하는 해녀들의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 바다가 ‘모두’의 것이란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된 접근과 통행의 권리는 다국적기업의 시초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포르투갈 바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카프라·마테이, 2019). 포르투갈 입장에서 보자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모두’라는 이름 아래 바다 커먼즈에 대한 포르투갈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요컨대 커먼즈 정치 연구에서 커먼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 무엇이라기보다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자 그 과정에서 의미를 획득하고 충돌하고 변화하는 것이다.⁴⁾ 이에 커먼즈 정치 연구는 커먼즈의 경계와 권리가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탐색하며, 커먼즈를 구성·탈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제, 식민화, 권리의 상실 등을 문제 삼는다. 커먼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보다는 커먼즈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의미로 규정되는지, 커먼즈에 대한 권리는 어떤 맥락과 이해관계를 담지하며 주장되고 경합하는지 등을 탐구하는 것이 커먼즈 정치 연구의 접근이다. 커먼즈 정치 연구 접근법이 커먼즈 관리 연구 접근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대기 커먼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커먼즈 관리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공동 관리 집단(common-pool)의 제도에 따라 커먼즈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커먼즈 관리 연구의 전제가 대기와 같이 큰 규모의 자원 관리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Araral, 2014), 큰 규모의 자원을 다루는 커먼즈 관리 연구는 개인 행위자가 아니라 정부,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 관리 집단의 협력 제도를 구상한다. 맥기니스와 오스트롬은 대기를 커먼즈 상황에 놓인 자원 중 규모가 매우 큰 사례로 보면서 정

4) 영해의 경계와 권리 변화는 또 다른 예다. 영해를 연안으로부터 몇 해리 내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국제법의 변화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통칭되는 영해에 대한 권리는 ‘우리’ 바다에 대한 경계와 권리가 특정하게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준다(아키미치 토모야, 2007).

〈표 1〉 커먼즈 관리 연구와 커먼즈 정치 연구

연구 접근법	커먼즈 관리	커먼즈 정치
이론적 기반	객관주의	구성주의
커먼즈에 대한 가정	자원이 놓인 객관적 상황 (예: 비배제성과 감소성)에 따라 커먼즈가 정의됨	커먼즈는 정치적으로 규정되고 구성됨
문제 설정	커먼즈 이용에서 나타나는 혼잡, 무임승차, 과도·과소 이용 등	커먼즈 구성에서 나타나는 배제, 식민화, 권리 상실 등
주요 관심	커먼즈를 관리하는 제도, 커먼즈의 지속 가능한 이용	커먼즈를 구성하는 정치, 커먼즈에 대한 권리의 결합
주요 연구 질문	커먼즈 상황에 놓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커먼즈의 구성, 탈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가?

출처: 정영신(2020) 재구성.

부, 기업, 단체, 국제기구 등이 상호 감시, 제재하는 관리 제도를 탐색했다 (McGinnis & Ostrom, 1996). 커먼즈 관리 관점에서 대기 커먼즈는 정부와 기업, 단체, 국제기구 등이 커먼즈 관리의 주요 행위자로 드러나는 자원으로 설정되는데, 대기는 그러한 틀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원이므로 시장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벅(Susan Buck)은 오스트롬의 커먼즈 관리 원리, 원칙을 변형하고 추가하더라도 대기 관리에 적용하기는 힘들므로 대기는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Buck, 1998).

커먼즈 관리 관점은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기 커먼즈의 경계가 주로 국가라는 주어진 영토를 단위로 하여 설정되기에 경계에 대한 질문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또 대기 커먼즈가 이용과 관리의 대상으로, 공동체가 이용자나 관리자로 이미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경계 설정에 대한 탐구는 미흡하다.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와 같이 명백하게 탈영토적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경계를 의문시하지 않을 경우, 불의를 생산하는 탈영토적 세력과 관계망을 영속시키며 경계가 모호한 세력과 관계망은 권리와 책임을 논하는 공론장으로부터 면제된다(프레이저, 2010). 나아가 대기 커먼즈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그 결과로 도출

되는 커먼즈의 성공적 관리가 주요 관심사이므로 그러한 제도나 실천이 어떤 범주로 정치 공동체와 권리를 상징하는지, 공동체가 외부와 맺는 관계나 공동체들이 연결되는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 대기 커먼즈의 구성과 탈구성에 개입된 정치적 과정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지게 된다.

커먼즈 정치 관점에서는 객관적 실물로서 대기 커먼즈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대기를 커먼즈로 보는 여러 입장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 같은 관점은 대기 커먼즈와 공동체를 고정시키고 관리 제도를 구상하는 대신 누가 어떤 상황에서 대기를 커먼즈로 주장하고 커먼즈에 권리를 가진 공동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커먼즈 정치 관점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 커먼즈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구상하기보다는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3. 연구 사례와 연구 방법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대기에 공동 구속되어 있고 대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기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 대기를 커먼즈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기가 커먼즈로 발화되고 대기 커먼즈에 대한 고유의 논리가 구성되면서 대기 커먼즈가 정의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사례가 대기·기후 운동이다. 대기·기후 운동은 대기 중에 각종 물질들(중금속, 먼지, 이산화탄소 등)이 사회적으로 분포, 배치되는 과정에서 부상하고, 특정 계기를 통해 대기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때 주장되는 대기에 대한 공동의 권리는 각 대기·기후 운동마다 상이한 내용과 범주로 구성된다. 이는 대기 커먼즈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지점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는 그간 한국에서 나타난 대기·기후 운동으로,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이다. 이 운동들은 서로 다른 대기 중 물질을 매개로 형성되었다. 반공해 운동에서는 대기 중의 공업 부산물을, 블루스카이 운동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미세먼지 대응 운동에서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를, 청년 기후 운동에서는 온실가스를 문제 삼는 특정 시민 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수년 간 운동이 지속되면서 고유의 논리가 형성되었다. 또 각각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다. 반공해 운동은 공해병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해 담론을 활발하게 생산하였으며 1970~1980년대 환경 운동사를 특징짓는 흐름으로 평가받는다(구도완, 2006). 블루스카이 운동은 2002년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mega event)를 계기로 정부와 협력하여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보전을 추진하였고 실질적인 도시 제도 개선과 시민 실천을 이끌어냈다(전북일보, 2002.7.27).⁵⁾ 2010년대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온라인 커뮤니티(online community)를 기반으로 수만 명이 결집하여 미세먼지 관련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중앙일보, 2017.4.5; 한국일보, 2017.11.4). 청년 기후 운동은 세계적인 청년 기후 운동과 흐름을 함께하며 한국의 기후 침묵(climate silence)을 깨는데 기여했다(김현우, 2020).

시기적으로나 맥락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형성된 대기·기후 운동들을 분석한 것은 대기 커먼즈가 주장되는 상황, 대기 커먼즈를 주장하는 집단과 논리 등을 넓게 펼쳐 놓음으로써 대기 커먼즈 정치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연구 사례를 선정하는 전략 중 하나는 최대 편차 사례(maximum variation cases)를 선택하는 것이다(Flyvbjerg, 2006). 이러한 전략은 해당 사례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매우 다른 과정과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이고자

5) 메가 이벤트란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을 포함하는 초대형 행사로서 여타 이벤트와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김애란 외, 2016). 메가 이벤트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 행사로서 대체로 대규모 관중이 동원되고 공공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치·개최하며, 준비단계에서 도시의 물리적 재개발, 개최시설 건설이나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대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특성을 보인다.

할 때 사용된다. 같은 의도로, 이 연구는 대기 커먼즈를 주장하는 상황과 조직, 방식 등이 매우 다른 경우라고 판단되는 네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⁶⁾ 이 사례들은 대기 커먼즈가 얼마나 다른 내용과 범주로 구성될 수 있는 지뿐만 아니라 커먼즈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주체로 여겨져 온 시민들이 얼마나 다른 양상으로 커먼즈 정치를 형성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자발적 시민의 등장과 실천 그 자체가 대기 커먼즈를 적절하게 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형성된 대기 커먼즈 논의의 틀, 대기 커먼즈의 범위, 대기 커먼즈에 대한 권리의 내용 등이 커먼즈 정치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 사례 내에서도 여러 시민 단체, 정부 부처와 기업 등 여러 조직과 단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존재하며, 이를 살펴보는 것 또한 대기 커먼즈 정치를 분석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민 단체라고 해서 늘 유사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매우 다른 입장과 논리를 구성하면서 커먼즈 정치를 형성하므로 시민 단체들의 커먼즈 구성 방식 사이의 간극과 긴장을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양상이 의미 있게 드러나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이 커먼즈를 탈구성하는 지배적인 세력과 힘, 커먼즈의 탈구성에 저항하며 커먼즈를 구성하려는 (주로 지역 공동체나 시민 단체의) 특정한 시도, 그 의의나 한계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러한 커먼즈 구성 시도가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커먼즈를 규정하는 방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선택한 사례들이 대기 커먼즈 정치를 분석하는 최적의 사례들이라기보다는 대기 커먼즈 정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린 스타트(Green Start) 운동, 빅에스크(Big Ask) 운동 등 대기 커먼즈를 주장하는 상황과 조직, 방식이 독특하더라도 이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대기·기후 운동이 다수 존재하며 그러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드러낸 대기 커먼즈 정치는 또 다른 풍성한 논의를 이끌 수 있다. 보다 다양한 대기·기후 운동을 포함한 대기 커먼즈 정치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이 연구의 목적이 대기·기후 운동의 역사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 흐름상 중요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연구 사례 선택의 타당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 중 하나라는 점, 커먼즈를 구성하는 여러 방식들이 경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지는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발화하고 규정하고 의미화한 대기 커먼즈가 서로 다르고 그 의미가 경합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커먼즈 정치의 일면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각 대기·기후 운동에서 누가 어떤 맥락에서 대기를 커먼즈로 발화했는지, 대기 커먼즈에 권리를 갖는 공동체는 어떤 범주와 내용으로 상정되었는지,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는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등이다. 각 운동이 하나의 단체나 조직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고 관련 조직이나 단체들이 함께 하나의 통일된 주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가정과 논리를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한 자료는 각 운동을 구성한 단체들이 작성하거나 발간한 문헌이다. 1970~1980년대 반공해운동을 추진했던 반공해 운동 단체는 크게 세 그룹 나뉜다. 공해추방운동연합 등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반(反)자본, 반정부 지향을 내세운 공해추방운동 그룹, 환경과공해연구회 등 대학 교수와 연구자 중심의 전문가 그룹, 한살림모임 등 심층생태주의 그룹 등이다(조홍섭, 1992). 그중 공해추방운동 그룹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뚜렷한 논리와 문제의식이 드러나기에(조홍섭, 1992), 이 연구에서는 공해추방운동 그룹에 속하는 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연합 등이 발간한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했다.⁷⁾ 또 블루스카이 운동은 2000년대 초반과 후반의 운동 양상이 다른데,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블루스카이 운동으로 제한하여 살펴본다.⁸⁾ 여러 환경단체들과 환경부의 협력 하에

7) 공해추방운동연합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반공해운동협의회,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단체다.

8) 2000년대 후반 블루스카이 운동은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 2007년부터 호흡기 질환을 앓아온 서울시민 23명을 원고로 서울 시와 현대·기아 등 자동차 회사에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 연구로는 김주희·이두갑(2020)이 있다.

진행되었으므로 환경단체들이 함께 발간한 문헌인 ‘2002 월드컵축구대회 시민 환경실천수칙’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블루스카이 운동에 참여한 환경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블루스카이 운동 관련 글, 환경부의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형성된 미세먼지 대응 운동의 경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집회, 정부 간담회를 활발하게 개최한 ‘미세먼지대응을추구합니다’를 택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글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주요 소통 경로로 하는 청년 기후 운동의 경우도 여러 청년 기후 운동 단체 중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기후 담론을 형성한 ‘청소년기후행동’의 SNS 게시글, 윤해영(2020) 등 청소년 기후행동에 참여한 청년이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든 사례 연구가 그렇듯이 이 연구 또한 필연적으로 사례 내에 존재하는 다종 다양한 양상들을 생략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그것이 얼마나 방대하든 사례를 대표할 수 없고 사례 내의 이질성을 모두 담아낼 수도 없다. 따라서 사례 연구에서는 어떤 자료를 왜 활용했는지 밝힘으로써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연구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기 커먼즈가 고유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과정을 밝히는 데에 관심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운동을 형성한 여러 단체들의 발간 문헌, 보도자료, 단체 구성원들의 인터뷰 자료, 자기보고서 등을 최대한 수집한 후 여타 대기·기후 운동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거나 여러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논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최종 분석 자료는 대기 커먼즈에 대한 각 운동의 독특한 관점과 논리가 잘 드러난 자료들이다.

4. 한국 대기·기후 운동에서 구성된 대기 커먼즈

1) 반공해 운동: 자본-국가로부터 민중의 것을 되찾자

반공해 운동은 1970~198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경제성장 전략이었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맥락 속에서 대기가 어떻게 커먼즈로 발화되고 주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에서 산업단지 건설은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산업단지 공급 전략에서 시작되었다(국토연구원, 2013). 1962년 울산공업지구가 국내 첫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경공업 위주였던 산업 체계를 전면 중화학공업화한다는 박정희 정부의 비전에 따라 1970년부터는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1980년까지 100억 불 수출, 1인당 1000불 소득’이란 목표가 설정되었고,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공업을 6대 전략업종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1973)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울산·미포, 구미, 창원, 온산 등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시 빈곤 탈피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였던 만큼 초기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주변 지역 주민 피해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김동술, 2013). 하지만 일본에서 유입된 공해 담론이 197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운동 세력의 민중담론과 결합하면서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한 질병과 각종 생활 피해가 민중의 고통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공해(公害)는 공익(公益), 공리(公利)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전후(戰後) 고도경제성장기(1955~1973)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미나마타 병, 이타이이타이 병, 옷카이치 천식, 니가타 병 등이 공해병으로 알려지면서 공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인권 침해, 경제적 피해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미야모토 겐이치, 2016). 오염(pollution)이 물리적 속성에 주목하는 용어라면 공해는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pollution damage)를 부각시킨 용어였다. 이러한 공해 담론이 추격성장을 가속화하던 시기이자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던 1970년대 한국에서

민중 담론과 결합한 것이다.

한국에서 공해 담론은 민주화 운동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초기 반공해 운동을 형성했다(신동호, 2007). 한국 최초의 반공해 운동 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가 민주화 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대학생 중심의 반공해운동협의회(1984), 여성 중심의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1986) 등이 등장하여 공업단지 인근 주민의 피해를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여기서 대기는 커먼즈로서 중요하게 발화되었다. 반공해 운동은 대기오염에만 집중한 운동이 아니었지만 대기 중으로 확산된 공업 부산물인 중금속, 먼지 등과 그로 인한 주민 피해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반공해 운동 측은 깨끗한 공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국민의 공공재산인데 양적 경제성장과 이윤추구에 집중한 대기업들이 이를 오염시켜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1986). 특히 가해자는 주로 대기업, 피해자는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난한 시민과 농어민이라는 구도를 설정함으로써(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3) 민중에 대한 수탈을 강조했다.⁹⁾ 기업의 이윤원리와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정부에 맞서는 싸움, 민중의 운동도 강조되었다(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3). 반공해 운동에서 대기는 민중의 것으로 설정되었고, 대기 커먼즈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본과 국가로부터 민중의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반공해 운동은 자본이 대기를 전유함으로써 민중이 갖는 대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권리 침해 정도가 커 불의(不義)하다. 오염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공해 피해가 불가역적이어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신체

9) 민중은 피지배층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 기원은 동학 농민 운동, 신채호와 백남운의 사상까지 거슬러간다(박치현, 2019).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배제된 대중을 지칭하는 용어로 민중신학, 민중문학에서 민중 개념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민중은 사회변혁, 사회운동의 주체로 여겨졌다. 민중은 80년대 한국 지식인층이 한국사회를 기술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였다.

적 피해를 남긴다는 점도 공해의 불의한 측면이었다(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3). 반공해 운동에서 공해병 환자 신체는 이러한 불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였다(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 미상).

현대사회는 대기업의 손에 환경이 독점 당하는 것에 의해서 주민의 환경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한다. …… 주민 사이에도 고액 소득자가 저액 소득자에 비해서 좋은 환경을 향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이것은 진실로 공해문제의 본질을 나타내는 응답이었다. …… 대기오염을 격화시키는 경향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자 계급 내지 하층 중산계급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 고소득자는 소음, 진동의 영향이 적은 견고한 주택에 살며 공기 청정기를 가동시키고, 세계 각지의 오염되지 않은 생선이나 자연식을 가져오게 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생활을 즐긴다. 만약 병에 걸려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고, 요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여기에 반해서 궁핍한 사람은 정면으로 환경파괴의 영향을 받는다. …… 환경파괴에 의한 죽음에는 경제적 서열이 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3: 24~27).

반공해 운동에서 발화된 대기 커먼즈는 1970~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선택된 중화학공업화와 대규모 산업단지 공급을 맥락으로 한다. 중화학공업단지에서 배출된 공업 부산물이 공기 등으로 확산되면서 공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한 반공해 운동은 민중 담론과 일본에서 유입된 공해 담론을 결합시켜 민중의 것인 대기 커먼즈를 자본이 전유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 자본이 민중의 것을 수탈하는데도 국가가 방기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발생한 공해가 민중의 생존과 생계를 위협하고, 특히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민중의 생존권이 보다 크게 침해당하기 때문에 민중의 것을 되찾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공해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는 민중의 것으로, 민중 대(對) 자본-국가의 서사를 통해 주장되었다.

2) 블루스카이 운동: 시민은 피해자이자 가해자, 도시 대기질을 내부 제도로 관리하자

1990년대 들어 공해 담론은 환경 담론, 지속가능발전 담론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공해 유발 기업, 이를 규제하지 않는 정부 대(對) 고통 받는 민중이라는 구도 속에서 반공해 운동의 대기 커먼즈 주장은 자본-국가 연합의 산업화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저항적 성격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이 이야기되면서 완화되었다(구도완, 2006). 당시 공해추방운동연합 등 반공해 운동 단체들도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신동호, 2007).

블루스카이 운동은 환경 담론이 확산되던 2000년대 초반 등장했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2002 한·일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 개최를 배경으로 대기 커먼즈가 독특한 방식으로 발화된 사례다. 발화 주체는 반공해 대신 환경을 표방한 환경단체와 정부였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2002 월드컵을 계기로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여러 환경단체들에 의해 기획되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월드컵과 대기 보전을 연계하는 운동이었다(박용신, 2001). 운동의 초점은 월드컵 개최도시의 대기질 개선에 있었다. 월드컵 개최 도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대기오염 저감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 서울, 인천, 수원 등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질과 비교하는 활동 등이 진행되었다.¹⁰⁾ 환경부 또한 복합 기획 상품이자 최대의 문화 이벤트인 2002 월드컵이 ‘클린 코리아(Clean Korea)’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환경단체들의 대기 보전 운동을 지원했다(환경부, 2002). 환경부의 지원 아래 환경단체들은 ‘녹색 시민월드컵 D-100일 합동토

10) 환경정의의 웹사이트. “한일 월드컵 도시 대기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http://eco.or.kr/wordpress/7902/>(검색일: 2020.12.15).

론회’를 열고 ‘월드컵 시민 환경실천수칙’을 발표했다(환경부, 2002). 월드컵 기간 중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질 관리와 경기장 및 도시 미관 정돈을 위한 수칙이었다(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외, 2002).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로 꼽혔기에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서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0년에는 인구 천 명당 1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등록되었고, 1995년에는 1990년과 비교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던 시기였다(서울시, 2010). 월드컵 개최 도시의 자동차 관리를 위해 정부는 개최 도시의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개최 기간에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 실천 수칙으로서 월드컵 대회 기간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 부제(部制) 운행 지키기,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기 등을 강조했다(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외, 2002). 월드컵이 개막되기 전에는 환경단체, 환경부, 지자체, 언론사, 자동차 산업계의 협력 하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시민 실천 캠페인’도 진행되었다(한겨레, 2002.2.19). 월드컵 개최 도시의 자동차 기업 직영 정비소에서 시민들이 차량 점검과 간단한 정비 서비스를 받으면 차량에 점검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블루스카이 운동은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질을 도시의 내부 조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했다. 공동의 것으로서 대기에 대한 주장은 월드컵 개최 도시라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었고 정부와 월드컵 개최 도시 시민이 대기 커먼즈의 관리자로 설정되었다. 정부는 월드컵 개최 도시 내 자동차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민은 차량 배출가스 점검, 차량 2부제 등에 참여함으로써 대기 커먼즈를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 월드컵은 내 차부터’ 캠페인은 시민을 대기오염의 피해자이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가해자로 설정했다.¹¹⁾ 시민이 함께 지키고 누려야 할 대기 커먼즈를 손상시켜 대기 커먼즈에 대한 자기 권

11) 환경정의 웹사이트. “‘환경 월드컵은 내 차부터’: 환경월드컵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시민 캠페인.” <http://eco.or.kr/wordpress/7915/>(검색일: 2020.12.15).

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는 대기 커먼즈가 자본이라는 민중의 외부 세력에 의해 전유되어 탈구성되었다는 반공해 운동의 논리와는 상이한 것이었다. 반공해 운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대기 오염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간주되었던 것과 달리 블루스카이 운동에서는 시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 제공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간주하고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했다.

이 같은 블루스카이 운동은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커먼즈를 잘 관리함으로써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환경부, 2002). 특히 대기 커먼즈를 보전하는 시민의 실천은 축구 경기력 향상과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여러 나라들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선을 획득하는 길, 국가 브랜드인 ‘다이나믹 코리아’를 실현하는 길로 여겨졌다(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외, 2002).¹²⁾ 블루스카이 운동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질 보전에 집중한 점, 블루스카이 운동에서 진행된 퍼포먼스에서 방독면을 쓴 축구 선수가 지속적으로 등장한 점 등은 대기 커먼즈 관리가 국제 축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의 연결 속에서 촉구되었음을 보여준다.¹³⁾

블루스카이 운동에서 논의된 대기 커먼즈는 1990년대 들어 자본과 국가에 대한 저항적 성격이 완화된 환경 담론이 확산되고 도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맥락 속에서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등

12) ‘다이나믹 코리아’는 2001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월드컵 준비 상황 점검 국무회의에서 국가 브랜드로 공식 인정받았다. 기존의 국가 브랜드였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Land of Morning Calm)’를 월드컵을 계기로 대체한 것이다. 국가 브랜드(branding)은 국가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 자본, 관광객, 인재를 유치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한 방법이다(김유경 외, 2010). ‘다이나믹 코리아’는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한국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 속에서 2014년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로 변경되기 전까지 국가 브랜드로 활용되었다.

13) 환경정의의 웹사이트. “Blue Sky 2002 운동본부 출범식.” <http://eco.or.kr/wordpress/7898/> (검색일: 2020.12.15).

장한 것이다. 환경단체들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블루스카이 운동은 월드컵 개최 도시 상공의 대기를 도시 내부의 제도와 실천을 통해 관리하고자 했다.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오염은 월드컵 경기를 원활하게 개최하는 데 장애물이었다. 월드컵 개최 도시에서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자동차였으므로 자동차 관리가 대기질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기오염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설정하고, 시민과 국가가 협력하여 대기 커먼즈를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대기 커먼즈 관리는 세계 시장에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국가 경쟁력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논리로 이어졌다.

3) 미세먼지 대응 운동: 국가가 국민과 아동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등장했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미세먼지의 국가 간, 지역 간 확산 문제와 미세먼지로 인한 아동 피해를 다루며 고유한 방식으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고 주장한 사례다.

미세먼지는 주로 화석연료를 투입하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폐기물 소각 과정 등에서 연소 부산물로 발생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를 통해 성장해 왔던 만큼 미세먼지는 동아시아에 상존하는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나 공장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미세먼지 문제는 해당 지역의 문제로 여겨졌다. 마찬가지로 1990~2000년대 지구적 생산 분업의 확대, 다국적 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 등을 통해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의 대기질 악화는 중국의 문제였다.

그러던 중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미세먼지 논의도 활성화되었다. 한국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1980년대 후반

에 등장해 2000년대부터는 공론장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일상화되었고,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공간 중 하나였다(류석진 외, 2016). 2016년 ‘미세먼지대책을추구합니다’ 등 미세먼지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설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커뮤니티 회원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응 운동이 시작되었다.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정부’에게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촉구하는 운동이었다.¹⁴⁾ 주요 참여자는 자녀를 둔 30~40대 여성으로, 이들에게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이 자녀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형성되었던 만큼 대기 커먼즈에 대한 주장도 아동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과 농도에 의해 좌우된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 측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 기준 조정과 아동의 야외 교육 활동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이 활동하는 교육기관에 공기 청정기와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당장 대기질이 개선되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이에 대기오염에 취약한 국민(아동)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도 문제였다. 대기의 흐름이 느려질 경우 확산된 미세먼지가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축적·정체되면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특히 주변국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형성되고 국내로 확산된다는 점을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로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¹⁵⁾ 여기서 중국과 한국의 영토 경

14) 미세먼지대책을추구합니다 웹사이트. 2018.11.22. “미대축은.” <https://cafe.naver.com/dustout/> (검색일: 2020.2.2).

15) 미세먼지대책을추구합니다 웹사이트. 2019.03.18. “2016년 미대축.” <https://cafe.naver.com/dustout/> (검색일: 2020.2.2).

계가 포함된 미세먼지 지도가 활발하게 생산되었다. 대기 커먼즈는 국민의 것으로 상정되었고, 대기 커먼즈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강조되었다.

대기 커먼즈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것은 무책임한 국가에서 기인했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국가를 경계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고, 국민의 것을 신탁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가의 책임이란 국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할 책임과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었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이 미세먼지 관련법과 정책 마련에 주력한 것도 국가의 책임 이행이 대기 커먼즈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에 핵심적이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특히 미세먼지 영향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가가 공기 청정기와 환기 장치를 구매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교육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립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 속에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공기정화장치를 제대로 갖춰 1군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¹⁶⁾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화석연료 대량 소비의 역사에 상존해 온 부산물인 미세먼지가 커먼즈 정치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계 보건기구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고지한 이후 자녀 건강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하여 대기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 특히 건강 취약 계층으로서 아동의 숨 쉴 권리를 주장했다. 대기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에게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영토 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

16)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웹사이트. 2018.04.03. “교육기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서명 운동.” <https://cafe.naver.com/dustout/>(검색일: 2020.2.2).

해 중국과 협상하고, 국내법과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특히 취약 계층에게는 공기 정화 제품을 구매하여 보급함으로써 대기 커먼즈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청년 기후 운동: 미래에 대기를 향유할 나의 정치적 위치를 인정하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인간 활동 부산물 중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의 온실기체(Greenhouse gases, GHGs)는 지표면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반사하여 지구 평균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기후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야기한다. 기후변화는 1970년대까지는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이 유보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유엔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국제 과학자조합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등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규명에 주력하면서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관심사이자 협의의 사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박희재, 2008).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프로그램은 1988년 기후변화가 미칠 지구적 위험 평가를 위해 과학자 집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구성했다. IPCC의 첫 평가보고서(1990)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채택되었다. 같은 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택된 이후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기 중 탄소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논의와는 달리 한국은 '기후 침묵'이라 불릴 만큼 제도적 논의나 언론 보도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대중적인 기후 운동도 부재했다(윤순진, 2016; 박선아, 2017; 김현우, 2020).

그러던 중 2010년 후반 한국에서는 기후 운동이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스스로 청년(youth)임을 부각시킨 기후변화청년단체 각(GEYK,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2014),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 Wave)(2016), 청소년기후행동(2018),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Guardians of Climate)(2019), 대학생기후행동(2020) 등이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등장했다. 그 맥락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기후 부채(climate debt) 담론,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된 세계 곳곳의 청년 기후 운동과 기후 파업(climate strike) 등이 있었다.

기후 부채는 생태 부채(ecological debt) 개념에서 발전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Warlenius, 2018). 기후 부채 개념은 2000년대 후반부터 UNFCCC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에 의해 세대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기 시작했다. 당사국총회에 가입하고자 한 청년들이 2005년부터 청년총회(Conference of Youth, COY)를 구성하여 청년의 입장을 당사국총회에 전달하고 2009년부터는 청년선거구(Youth NGO, YOUNGO)가 당사국총회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조직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 청년을 원고로 한 기후 소송들이 이루어져 기후·대기 시스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법적 권리를 쟁점화하기도 했다(박태현·이병천, 2016). 청년들이 COP에 가입하고 기후 부채 논의가 확산되는 흐름은 한국 청년들이 기후 운동 단체를 만드는 한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IPCC 보고서에서 다뤄진 미래 지구 변화, 미래에 대한 현 세대의 기후 부채 등 COP에서 다뤄진 논의들이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기후변화를 다루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 기후 운동은 2010년대 후반 세계 곳곳의 기후 파업, 특히 청년 기후 파업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그 촉발제는 스웨덴 청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기후 파업 시위였다. 2018년 당시 15세였던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파업 시위를 한 것이 SNS를 통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ForFuture)이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이는 동료 청년들을 비롯해 다른 학교와 나라로 확산되었으며 국제적인 기후 파업 운동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청년 기후 운동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급물살을 탔다.

청년 기후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는 미래에 살아갈 자신들의 일상과 생존까지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청년들은 대기 커먼즈에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미래를 우려했다. 앞 세대가 수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고 현 세대가 그것을 멈추고 있지 않아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미래에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의 미래를 꿈 꿀 권리’, ‘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권리’ 등은 미래를 살아갈 청년 자신과 미래 세대가 갖는 대기 커먼즈에 대한 권리로 정의된다.¹⁷⁾

청년 기후 운동은 청년이 기후변화의 위협에 노출되고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당사자”인데도,¹⁸⁾ 대기 중에 탄소를 배출하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절박함, 시급함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숙함’, ‘무지함’, ‘기특함’이라는 수사 속에 여전히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치적 위치가 낮은 존재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나는 기후위기 앞에서 그 모든 장애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절박함을 느낀다. …… 나이가 어리다는 특징이 관심을 끌지만, 미숙함으로 인식되어 ‘너희가 뭘 알아서’라는 시선을 받기 쉽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만난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너무 한 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건 나중에 커서 해도 늦지 않다, 너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등등. 대입을 앞둔 한 분은 “이게 네 진로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 “학생들, 기특하네.”라는 격려를 많이 받는다. …… 격려 뒤에는 또 이런 말이 따라온다. “대학 잘 가려고 하는 거야?” …… 결국 그 말은 우리 행동의 가치를 그 정도에 그치게 한다(윤혜영, 2020).

17) 청소년기후행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uth4climateaction.kr/>(검색일: 2020.11.26)

18)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https://youth4climateaction.org/>(검색일: 2020.11.26)

청년 기후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기제는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무시, 정치적 위치 박탈이었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는 시스템과 기후변화를 논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무시는 두 기제를 통해 청년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기후 운동은 화석연료를 채취하고 연소하는 시스템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에 탄소가 방출되고 그것이 야기할 사회적 충격이 예견되면서, 세계적인 기후 파업과 기후 부채 담론 등이 확산된 맥락에서 등장했다. 청년들은 대기를 매개로 연결된 미래의 당사자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미래의 자신이 대기 커먼즈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기후 운동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탄소 배출 시스템을 지속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의 부당함에 대해 말하는 청년을 정치적으로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무시가 대기 커먼즈를 탈구성하는 기제라고 보았다.

5. 대기 커먼즈 정치

이상의 사례들은 대기가 단지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기 중 물질 구성과 분포는 수 세기에 걸쳐 발전한 화석연료 기반 산업, 무역 시슬로 연결된 세계 경제, 국가의 성장 전략, 자동차와 같은 특정 기술의 보편화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정된다. 대기 중 중금속과 황산화물 등이 공업단지 인근에 집중되는가 하면 자동차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도시에서는 질소산화물과 먼지의 농도가 높아졌다. 대기 중 탄소 농도는 지하에서 탄소를 추출하고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산업 시스템에 의해 증가하여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의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대기·기후 운동은 대기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가진 공동체, 대기에 대한 공동의 권리가 박탈되는 기제 등을 상이하게 해석하며 특정한 형태의 정치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다. 앞서 살펴본 대기·기후 운동에서는 대기에 때로는 계급 정치가, 때로는 도시 관리 정치, 국민 국가(nation state)의 복지

〈표 2〉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구분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커먼즈 발화 맥락	중화학공업화,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월드컵 개최, 자동차 보편화	화석연료 산업, 세계보건기구 발표	화석연료 산업, 세계 기후 파업
커먼즈 발화 주체	민주화 운동 세력	환경단체, 정부	업마	청년
상징된 커먼즈(권리) 공동체	민중	월드컵 개최 도시	국민, 아동	나, 미래 세대
상징된 커먼즈 탈구성 기제	자본-국가	도시 내부	무책임한 국가	무시
커먼즈 정치 형태	계급 정치	도시 관리 정치	국민 국가의 복지 정치	인정 정치

정치, 인정 정치가 각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예컨대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반공해 운동은 피 지배 계급으로서 민중을 대기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가진 공동체로 상징했다. 자본-국가 연합이 민중의 대기 커먼즈를 전유하여 민중의 권리를 강탈하고 있으므로 이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공해 운동은 대기 커먼즈를 계급 정치로 구성한 사례였다.

2000년대 초반 환경단체와 정부의 협력하에 진행된 블루스카이 운동에서 국가는 민중의 커먼즈를 강탈하는 적이 아니라 도시 시민과 함께 커먼즈를 관리하는 협력자로 이해되었다. 도시의 대기 커먼즈에 발생하는 문제는 도시 내부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시민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구도를 설정했다. 이 같은 구도가 반공해 운동에서는 ‘공해의 가해자인 기업에서 피해자인 시민에게 책임이 전가된다’(이수경, 1987)며 우려되었던 것과 달리 블루스카이 운동에서는 대기 커먼즈가 권리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설정된 것이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도시 관리의 일환으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 사례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는 국민 국가를 경계로 구성되었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국가의 영역성(territoriality)에 근거한 주체로서 국민을 대기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가진 공동체로 상징했다. 국가의 역할은 외적으

로는 국가 영역성을 강화하고 내적으로는 영역 공동체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특히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가 무책임할 경우 국민의 대기 커먼즈가 탈구성된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대기 커먼즈를 국민 국가의 복지 책임 문제로 구성한 사례다.

청년 기후 운동은 청년 스스로와 미래 세대가 대기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 권리가 박탈당하는 이유는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권리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기후 운동은 대기 커먼즈를 인정의 정치로 구성했다.¹⁹⁾

이상의 대기 커먼즈 정치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논의를 검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하나는 커먼즈 정치의 탈영토성에 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적 커먼즈에 대한 논의다.

1) 탈영토적 커먼즈 정치의 가능성

대기 커먼즈 정치는 대기라는 공간의 수직성, 유동성, 비가시성으로 인해 보다 복잡하고 입체적인 정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대기는 해저나 우주 공간이 그렇듯이 비가시적인 수직 공간이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비어 있는

19) 여기서 말하는 인정 정치는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인정 정치를 정체성 정치와 등치시키는 논의들은 집단 고유의 정체성을 왜곡하지 않는 세계, 차이에 우호적인 세계 만들기를 지지한다. 하지만 정체성 정치는 불평등한 분배를 비롯한 여타 정의의 문제들에 무관심하거나 그것들과의 관계 속에 사회적 무시를 위치시키지 않는다. 인정 정치에 대한 정체성 모델을 비판하는 프레이저의 〈인정을 다시 생각하기(Rethinking recognition)〉는 상호 관계적이지만 상호 환원 불가능한 정의의 차원을 속에서 어떻게 인정 정치를 재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Fraser, 2000). 그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 집단적 정체성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 집단에 속함으로써 박탈되는 사회적 지위이고, 인정 정치는 동등한 위치 부여를 방해하는 제도나 틀을 변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논의를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청년 기후 운동이 기후 부채와 같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와 참여 불능의 틀 속에서 청년의 동등한 정치적 위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정 정치로 해석했다.

것처럼 보인다. 손에 잡히지 않고 영구적으로 차지하기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대기와 같은 수직 공간은 근대적인 영토 주권 개념에 도전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Carroll, 2015; Coleman, 2016 재인용).

프레이저에 따르면, 근대 주권 개념은 제한된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근대 영토 국가 틀에 근거한다(프레이저, 2010).²⁰⁾ 영토 국가 틀에서 진행되는 논쟁들은 계급적 불평등 해소든, 경제적 재분배든, 문화적 인정이든 제한된 정치체로서 국민을 당사자로 상정하고 국민 국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영토 국가의 틀로는 영토에 고정되고 뿌리를 내린 장소의 공간(the space of places)이 아니라 유동하는 흐름의 공간(the space of flow)에서 일어나는 문제, 국가 안과 밖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²¹⁾ 특히 유동하는 흐름의 공간에 공동 구속되고 영향 받는 이들이 시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불의 또한 시공간적으로 확장된다. 프레이저는 유동하는 공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 권리를 가진 당사자와 권리의 내용을 확장하고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프레이저, 2010).

그러나 수직적이고 유동하는 공간은 근대 영토 국가와 주권 개념을 주조한 ‘평평한 지리학(flat geography)’의 담론 속에서 납작하게 짓눌려 왔다(그레이엄, 2019). ‘평평한 지리학’의 시각으로 보면, 커먼즈는 자본이든 국가든 특정 공동체든 누군가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커먼즈의 정치는 영토를 차지하려는 각축전이다. 커먼즈에 대한 침략과 커먼즈로부터의 축출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또한 평평한 격자 공간을 두고 펼쳐진다. 커먼즈 정치가 수평적 시선에 갇힐 경우,

20) 프레이저는 제한된 영토에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국민이라는 단일하고 제한된 상상의 정치 공동체, 국민 경제 중심의 논의 등이 근대 영토 국가 틀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면서 이를 케인스주의적-베스트팔렌적 틀(Keynesian-Westphalian frame)이라고 불렀다(프레이저, 2010).

21) ‘장소의 공간’과 ‘흐름의 공간’은 카스텔(Manuel Castells)이 정보 사회의 공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한 개념이다. 프레이저는 이 표현을 빌려, 영토 국가 관할권 내에 국한되지 않는 불의의 문제가 ‘흐름의 공간’에 속하는 힘에 의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프레이저, 2010).

‘세계를 평평한 소유권 조각으로 분할·교환하여 커먼즈를 탈구성했던 근대의 영토적 발상’(카프라·마테이, 2019)이 재생산될 수 있다. 커먼즈 정치가 커먼즈라는 ‘영토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고자 전쟁을 치르는 남성적 정치’(티커너, 2007)로 환원될 가능성도 크다. 플레이어의 적절한 지적처럼, 영토적 발상에 의존한 해법은 영토 국가의 틀에서 생산되어 온 근대적 의미의 주권, 정치, 공동체 개념을 합리화하고 재생산한다(플레이저, 2010).

그런 의미에서 대기 커먼즈 정치는 유동하고 비가시화된 수직 공간을 정치 공간으로 호출하고, ‘암묵적 평면주의’(implicit horizontalism; Graham & Hewitt, 2013)에 의해 생략되거나 평면화되었던 정치적 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건할 가능성을 가진다. 가령 계급 정치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 반공해 운동은 수직 공간을 통해 비가시화된 계급화 과정과 수직 공간을 매개로 한 계급 정치를 부각시켰다. 특정 지역에 공업단지를 배치하고 공업 부산물을 만드는 집단과, 부산물로 인해 영향 받는 집단 사이에 지배/피지배 관계가 형성되지만 이는 대기라는 유동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을 통해 비가시화되었다. 부산물은 공단 상공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누적되었고, 부산물로 인한 영향도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공단 밖으로 공간적으로 확산되었다. 유동적인 공간에서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지배/피지배, 가해/피해 관계는 시공간적 기록물로서 공해병환자의 신체를 통해 드러났다.

또 대기 커먼즈를 인정 정치로 구성한 청년 기후 운동은 수직 공간의 단일성을 해체하고, 수직 공간을 통해 시간적으로 확장된 인정의 당사자를 출현시켰다. 지하에서 탄소를 채취하고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산업 체계, 정책, 문화는 대기를 매개로 하여 과거, 미래와 연결된다.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에 누적된 탄소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변동, 많은 이들의 삶의 전환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는 투명하고 단일한 전체처럼 보이기에 기후, 산업, 정책, 문화, 일상적 삶과 연결된, 특히 과거부터 미래까지 연결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체계로서 대기는 쉽게 블랙박스 처리되고(black-boxed) 가리워진다. 청년 기후 운동은 청년 스스로를 대기를 매개로 시공간

을 확장하여 전 지구적 공간 및 미래와 연결된 당사자로 드러냄으로써 인정의 정치를 확장하였다.

한편, 대기 커먼즈 정치는 평면적, 영토적 틀을 답습할 수도 있다. 블루스카이 운동과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각각 도시 행정구역 상공의 대기를 도시의 것으로, 국가 영토 상공의 대기를 국민의 것으로 상정했다. 블루스카이 운동의 경우 월드컵 개최 도시라는 영토를 설정하고 영토 내 대기질 관리에 집중하면서 대기라는 유동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탈영토적 관계들을 소거했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영공을 외부(중국)로부터 보호하는 국가, 영토 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등 근대 영토 국가의 틀을 적용했다. 또 블루스카이 운동에서 진행되었던 일본 도시와 한국 도시의 대기질 비교, 미세먼지 대응 운동에서 활발하게 생산된 미세먼지 지도 등은 대기라는 수직 공간을 조감하듯 내려다봄으로써 지평면에 눌러 고정시키는 기능을 했다. 대기 커먼즈 정치의 탈영토적, 입체적 특징보다는 국가의 일부이자 국경을 따라 분할된 영토로서 대기가 부각된 것이다. 대기는 이음새 없이 연결되고 막힘없이 흐르며 위험 또한 시공간적으로 영토 경계를 넘어 구성되지만 대기 커먼즈를 다루는 틀이 영토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 탈영토적 세력과 관계들(예컨대 세계 무역 사슬로 연결된 화석연료 기반 산업, 국가의 성장 전략과 연결된 자동차 생산 체계 등)은 시야에서 사라지며 탈영토적으로 구성되는 위험 공동체 또한 부상할 여지가 사라진다. 프레이저의 적절한 지적처럼, 탈영토적 불의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힘들은 정의의 당사자와 내용이 영토적 틀 내에서 논의됨으로써 쉽게 탈각된다(프레이저, 2010).

요컨대 대기 커먼즈의 정치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비가시화되는 수직 공간을 통해 불의가 생산되지만 바로 그러한 공간을 매개로 확장된 형태의 정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기 커먼즈의 정치가 영토 정치에 포획되어 근대적인 주권과 공동체의 틀 내에서 전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새로운 커먼즈 정치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

2) 지구적 커먼즈 논의의 한계

대기는 규모가 큰 지구적 커먼즈(global commons)로 분류된다(Buck, 1998; 볼리어, 2015). 지구상의 모두가 대기를 공동으로 향유하고 대기에 공동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의미다. 시장화 논의를 제외하면 대기와 같이 큰 규모의 커먼즈를 다루는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안새롬, 2020).

하나는 ‘책임 있는 국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대기 커먼즈는 국가가 공동체에게 신탁 받아 관리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다(Torres, 2001; 우자와 히로후미, 2019). 대표적인 논자인 우자와는 대기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하는 ‘사회적 공통 자본(社會的共通資本)’ 중 하나로 보았다.²²⁾ 그에 따르면 사회적 공통 자본은 사회 전체의 공통 자산이므로 국공유가 원칙이고 법적으로 국공유라 하더라도 사회적 기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준에 따른 관리 방법 중 하나가 신탁 관리이다. 우자와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신탁 관리자로 설정하지만 사회적 공통자본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사회적 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열거하였다(우자와 히로후미, 2019). 이에 따르면 대기는 국가의 신탁 관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회적 공통 자본이다. 그는 신탁 관리자 국가들 간 국제 네트워크를 구상했다. 가령 국제적인 사회적 공통 자본인 대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에 비례해서 환경세나 탄소세를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부과하여 국제기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우자와 히로후미, 2019).

22) 우자와는 사회적 공통 자본과 커먼즈를 구분하면서, 사회적 공통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특정한 범주의 자연 자원에 한정해 커먼즈라고 보았다(이병천, 2019 재인용). 커먼즈는 특정한 장소, 경계, 공동체가 확정된 자원으로 국한시키고, 사회적 공통 자본은 커먼즈를 포함하는 자연, 기반시설, 의료·교육 제도 등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로 설정했다. 하지만 우자와가 좁은 의미로 설정한 커먼즈 개념보다는 사회적 공통 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개한 논의가 오히려 커먼즈 논의와 맞닿아 있고, 특히 우자와의 사회적 공통 자본 개념은 제도, 기반 시설 등 큰 규모의 커먼즈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안새롬, 2020).

다른 하나는 협력 거버넌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오스트롬 그룹과 바우웬스(Michel Bauwens) 그룹에서 각각 진행되었는데, 공통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대기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스트롬 그룹은 큰 규모의 커먼즈를 다양한 경계와 중심이 있는 공동체들의 협력 제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Ostrom, 2010). 각 공동체가 고유의 자율성을 가지고, 복수의 중심이 인정된 공동체 연합에서 공동 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큰 규모의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대기 커먼즈 논의에도 적용되었다. 맥기니스와 오스트롬은 정부, 기업, 단체, 국제기구 등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대기 커먼즈를 관리하는 모델을 구상했다(McGinnis & Ostrom, 1996). 바우웬스 그룹의 경우에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구성된 삼두(參頭) 체제로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Bauwens et al., 2017). 국가는 시민사회의 파트너 국가(partner state)로 변모하고 파트너 국가의 도움에 힘입어 윤리적 경제(ethical economy)가 출현한다면 커먼즈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 하에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각해 대기 커먼즈도 파트너 국가와 윤리적 기업, 시민사회 사이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볼리어, 2015).

지구적 커먼즈를 다루는 주요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책임 있는 국가’든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한 결절점’이든 어떤 형태로든 국가를 호출한다. 특히 유동하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대기라는 공간은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커먼즈이고, 특정 공동체가 관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볼리어, 2015). 이처럼 ‘깔끔하게 구획되지 않은 커먼즈’를 관리하는 데에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구적 커먼즈 논의의 주요 전제다(볼리어, 2015).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는 지구적 커먼즈를 다루기 위해 ‘책임 있는 국가’ 혹은 ‘파트너 국가’를 중요하게 요청하는 경우 대기를 영토 단위로 쪼개어 사고하면서 쉽게 배타적 영역주의, 국민 국가 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대기를 국가 신탁 커먼즈

로 보면서 책임 있는 국가를 요청했다. 이는 영토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 외부의 적(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리 없이 이어졌다. 세계적인 생산 분업 흐름 속에서 중국과 한국에 배치된 대기 오염 문제가 영역 공동체 간 협상 문제로 쉽게 치환된 것이다. 또 책임 있는 국가에 대한 주요 요구 중 하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국민(아동)을 위해 국가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기청정기는 그 원리상 깨끗한 공기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장치, 바꾸어 말하면 구매력 있는 사람이 깨끗한 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로, 공기를 커먼즈가 아니라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로 변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²³⁾ 미세먼지 대응 운동이 신탁 관리자 국가를 요구하여 대기를 커먼즈로 유지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별개로 국가가 커먼즈의 상품화를 일부 허용하고 국가의 구매력으로 깨끗한 공기를 구매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기 커먼즈의 신탁 관리자로 설정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커먼즈의 시장화를 일부 허용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은 국민 국가의 복지 책임이라는 틀 내에서만 해소된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파트너 국가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기 커먼즈 관리를 추구했다. 여기서는 도시 상공의 대기 문제를 도시 내부의 메커니즘으로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대기를 분할된 영토(행정구역)를 경계로 구획했다. 파트너 국가 또한 영토에 근거한 주권 국가가 호출되었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시민단체와 국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민의 실천을 촉진하여 도시 상공의 대기질을 개선하였지만, 도시 대기질 관리를 위한 노력들은 ‘세계 시장 속 경쟁력 있는 국가 만들기’라는 논리로 쉽게 흡수되었다. 이는 커먼즈에서 생산된 공동의 가치를 흡수하여 경제 발전으로

23) 공기청정기가 깨끗한 공기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장치라면, 같은 원리로 에어컨은 찬 공기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장치다. 기후변화와 폭염, 도시 열섬 현상 속에서도 구매의사와 구매력이 있는 에어컨 이용자는 찬 공기를 이용할 수 있고, 에어컨 이용 시 외부로 방출되는 열기가 도시 열섬 현상을 가중시키지만 에어컨 이용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다(그레이엄, 2019: 394).

연결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행동 체계에 대한 연구(권범철, 2019)를 상기시킨다. 국가가 도시 경쟁력 향상의 도구로 커먼즈를 포섭함으로써 커먼즈를 공동의 삶의 기반이기보다는 도시의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는 자원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권범철, 2019).

대기는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구적 커먼즈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논의되는 방식에서 새로운 범주의 정치 공동체를 구상하지 않을 경우 배타적 영역주의, 국민 국가 중심주의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안새롬, 2020).

6. 나가며

커먼즈를 정치 영역으로 포착해서 대안 정치의 개념으로 위치시키려는 많은 노력들은 ‘커먼즈는 공동체의 것이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규범적 틀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왔다. 하지만 커먼즈에 권리를 갖는 공동체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누구로부터 커먼즈를 보호해야 하는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다소 소홀했다. 대기 커먼즈에 대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기 커먼즈는 대기 보전, 대기 관리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만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기 커먼즈가 어떤 의미로 구성될 수 있는지, 그러한 구성이 갖는 한계와 가능성은 무엇인지 등은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대기 커먼즈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대기에 함께 영향을 받고 대기를 함께 향유하므로 ‘모두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라는 이름 아래 대기에 각인된 불평등한 관계, 대기를 불균등하게 조성·분포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거나 그러한 정치적 과정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대기 커먼즈는 민중의 것, 도시의 것, 국민의 것, 미래 세대의 것 등 ‘우리의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을 통해 구성된다. 대기 커먼즈에 대한 논의는 대기의 물리적 속성에 근거하여 대기를 지구적 커

먼즈로 선언하는 데 그치지보다는 대기 커먼즈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규정되고 생산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대기 커먼즈 정치라는 시각은 대기라는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수직 공간을 통해 불평등이 비가시화되거나 불의가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해낼 수 있다. 가령 특정 지역에 공업단지를 배치하고 공업 부산물을 배출하는 집단과 부산물로 인해 영향 받는 집단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지만 이는 유동적이고 보이지 않는 대기를 통해 비가시화된다. 대기 중 탄소 배출로 야기되는 기후 불의 또한 투명한 대기 속에 쉽게 가리워지고 시공간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대기 커먼즈 정치란 시각이 제공하는 또 다른 기여는 수직적이고 유동적이고 보이지 않는 대기라는 공간을 매개로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순-그레이엄은 수평적 지평에 갇히지 않는 정치, ‘땅의 은유’에서 벗어난 정치, 길이도 폭도 두께도 결정되지 않은 공기 같은 정치 공간의 탐색을 요청했다(김순-그레이엄, 2013). 땅에 고정될 수 있고 점거와 변형이 즉각적, 가시적인 지평면의 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내용과 방식의 커먼즈 정치가 고안될 수 있다. 청년 기후 운동은 그러한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다. 대기를 매개로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공간의 차원에서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확장된 인정의 당사자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 커먼즈 정치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영토 단위로 구획되면 근대적인 영토 정치의 장으로 재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대기가 단지 물리적, 수평적으로 확장된 커먼즈로 해석되기보다는, 시공간적으로 누적된 관계망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권리와 책임을 다하면서 다층적으로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커먼즈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넓게 보면 커먼즈는 우리 삶에서 공동의 것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하는 개념이다.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각종 전염병 등 유래 없는 재난과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는 현 시대에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커먼즈를 구성하는 정치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 이는 커먼즈 정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

발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1.02.04

심사완료일: 2021.02.22

게재확정일: 2021.03.05

최종원고접수일: 2021.03.07

Abstract

Politics of the Atmospheric Commons Seen through Movements
agains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n Korea:
Speaking the Space of Flow and Invisibility

Saerom Ahn, Sun-Jin Yun

In the commons literature, there have been vast discussions based on the idea that atmospher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commons. Especially, appropriate institutions or rules to manage the atmospheric commons have intensively been explored from a view of the commons as an object of use and management.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what political process has been inscribed into the atmospheric commons and how it works. This article calls for rethinking the commons as a political process and political constitution. By us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politics of the commons’, this paper explores movements agains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from the 1970s to 2010s: ‘Against Pollution Damage’, ‘Blue-sky’, ‘Against Fine Dust’, and ‘Youth Climate Movements’. This article analyzes where the atmospheric commons becomes to be spoken, who speak the atmosphere as a commons, how communities having the right to the commons are defined, and how the mechanism of decommonisation is supposed. This is expected to show that the politics of class, urban management, nation-state, and recognition has been carved into the atmosphere, the space of flow and invisibility.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ost-territorial politics on the atmospheric commons.

Keywords: Atmospheric commons, Movements against air pollution damage, Blue sky movements, Movements against fine dust, Youth climate movements, Commons politics

참고문헌

-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1986. 「창립선언문」. 《공해와 생존》, 창간호, 3.
- 공해추방운동연합. 1990. 「인간의 생존환경과 공해」. 『1990 지구의 날 기념자료집: 이 땅을, 이 하늘을 우리 모두를 위해』.
-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 미상. 『어디로 갈거냐: 울산·온산 공해피해와 4만여 주민이주』.
- 구도완. 2006. 「한국 환경운동의 담론: 낭만주의와 합리주의」. 《경제와사회》, 128~153쪽.
- 국토연구원. 2013. 「산업단지 1,000개 시대와 산업입지 정책 과제」. 《국토정책》, 420, 1~8쪽.
- 권범철. 2019. 「도시 공통계의 생산과 전유: 오아시스 프로젝트와 문래예술공단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술. 2013. 「우리나라 대기오염 역사, 규제의 변천, 현행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9(4), 353~368쪽.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언론과 사회》, 24(1), 5~68쪽.
- 김애란·임명재·정강환. 2016. 「메가이벤트가 개최지역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8(1), 203~221쪽.
- 김유경·김유신·박성현. 2010.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접근: Korean Dynamism의 철학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5~25쪽.
- 김주희·이두갑. 2020. 「법정에 선 대기오염의 “화학적 인프라”: 서울 대기오염 소송(2007~2014)을 중심으로」. 《ECO》, 24(2), 129~168쪽.
- 김현우. 2020. 「기후위기 운동의 접합, 그러나 더 길고 단단한 운동을 시작할 때」. 《의료와사회》, (10), 96~107쪽.
- 그레이엄, 스티븐(Stephen Graham). 2019. 『수직사회: 새로운 공간은 어떻게 계층의 격차를 강화하는가』. 유나영 옮김. 책세상.
- 김슨 그레이엄, J K(J. K. Gibson-Graham). 2013.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여성주의 정치경제 비판』. 엄은희, 이현재 옮김. 알트.
- 라인보우, 피터(Peter Linebaugh).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정남영 옮김. 갈무리.
- 류석진·조희정·이현아. 2016. 『공동체의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 미래인.
-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 2016. 『공해의 역사를 말한다: 전후공해사론』. 김해창 옮김. 미세움.
- 박선아. 2017. 「한국사회 커뮤니케이션 세계와 기후운동: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 기후운동은 가능한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12~525쪽.
- 박용신. 2001. 「서울 스모그와 블루 스카이 2002」, 《함께사는길》.

- 박치현. 2019. 「1980년대의 자기기술: 민중, 중산층, 중민, 시민」. 《역사문제연구》, 41(1), 47~90쪽.
- 박희제. 2008. 「기후변화 논쟁을 통해 본 환경과학의 역할과 성격」. 《ECO》, 12(1), 183~216쪽.
- 볼리어, 데이비드(David Bollier).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옮김. 갈무리.
- 서울시. 2010. 서울통계. <http://data.si.re.kr/node/357#print>(검색일: 2020.12.22).
- 신동호. 2007. 『자연의 친구들 1: 환경운동 25년사』. 도요새.
- 안새롬. 2020.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대기 커먼즈를 위한 시론」. 《ECO》, 24(1), 333~370쪽.
- 오스트롬, 엘리너(Elinor Ostrom).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연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안도경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弥). 2007.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 공유에 관한 역사생태인류학적 연구』. 이선에 옮김. 새로운사람들.
- 우자와 히로후미(宇澤弘文). 2008. 『사회적 공동자본: 진보적 공공경제학의 모색』. 이병천 옮김. 필맥.
- 우자와 히로후미(宇澤弘文). 2019. 『사회적 공동자본의 경제학: 우자와 히로후미의 유고집』. 최현, 이병천, 김자경, 윤여일 옮김. 진인진.
- 윤순진. 2002.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ECO》, 8~42쪽.
- 윤순진. 2016.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 《ECO》, 20(1), 7~61쪽.
- 윤순진, 차준희. 2009.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사회》, 19(2), 125~166쪽.
- 윤혜영. 2020. 「영향, 연결, 행동」. 『인플루언서』. 민음사.
- 이병천. 2019. 「우자와 히로후미의 사회적 공동자본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회적 공동자본의 경제학: 우자와 히로후미의 유고집』. 진인진.
- 이수경. 1987. 공해반대 시민운동을 위한 제안. 《공해와 생존》, 6, 4-5쪽.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경제와사회》, 20(1), 399~442쪽.
- 정영신. 2019. 「커먼즈론에 입각한 사회변동 연구를 위한 개념적 접근」. 장훈교, 최현, 윤여일, 박서현 편. 『공동자본의 영역들』. 진인진.
- 정영신.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237~259쪽.
- 조홍섭. 1992.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주소」. 《과학사상》, 3, 110~124쪽.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시민운동협의회, BLUE SKY 2002 운동본부(2002), 『2002 월드컵축구대회 시민환경실천수칙』.
- 카프라, 프리초프(Fritjof Capra), 마테이, 우고(Ugo Mattei). 2019. 『최후의 전환: 지속 가능한

-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박태현·김영준·옴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티커너, 안(J. Ann Tickner). 2007. 『여성과 국제정치』. 황영주 외 옴김.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프레이저, 낸시(Nancy Fraser). 2010.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김원식 옴김. 그린비.
- 한겨레. 2002.02.19. 「2002 환경월드컵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시민캠페인」.
-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3. 『내땅이 죽어간다: 공해문제의 인식』. 일월서각.
- 환경부. 2002.02.14. 월드컵 시민 환경실천수칙 발표.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44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82547&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검색일: 2020.12.14).
- Araral, E. 2014. "Ostrom, Hardin and the commons: A critical appreciation and a revisionist view."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36, pp.11~23.
- Bauwens, M. Kostakis, V., Troncoso, S., and Utratel, A. M. 2017.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P2P Foundation.
- Bollier, D. 2004. Who Owns the Sky? Reviving the Commons. In *These Times*. <https://inthesetimes.com/article/who-owns-the-sky>(검색일: 2021.1.28).
- Bollier, D. & Helfrich, S. 2019. *Free, Fair, and Alive: The Insurgent Power of the Commons*. Gabriola Island, BC, Canada: New Society.
- Bryant, R. 1998. "Power, Knowledge and Political Ecology in the Third World: A Review." *Progress in Physical Geography* 22(1), pp.79~94.
- Buck, S. J. 1998. *The Global Commons: An Introduction*. Washington, D.C: Island Press.
- Carroll, S. 2015. *An empire of air and water: Uncolonisable space in the British imagin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oleman, D. 2016. "An Empire of Air and Water: Uncolonizable Space in the British Imagination, 1750-1850." *European Romantic Review*, 27(1), pp.87~90.
- Federici, S. 2010.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in Hughes, C. et al(eds.). *Uses of a Whirlwind: Movement, Movements, and Contemporary Radical Currents in the United States*. Oakland, CA: AK Press, pp.379~390.
- Flyvbjerg, B. 2006.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ase-study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2(2), pp.219~245.
- Fraser, N. 2000. "Rethinking recognition: Overcoming Displacement and Reification in Cultural Politics." *New left review*, 2(3), pp.107~120.
- Graham, S. & Hewitt, L. 2013. "Getting off the ground: On the politics of urban

- vertical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7(1), pp. 72-92.
- McGinnis, M. & Ostrom, E. 1996. "Design principles for local and global common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2*, pp.465-493.
- Nayak, P. K. & Berkes, F. 2011. "Commonisation and decommissionation: understanding the processes of change in the Chilika Lagoon, India." *Conservation and Society* 9(2), pp.132-145.
- Ostrom, E. 2010. "Polycentric systems for coping with collective ac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0(4), pp.550-557.
- Torres, G. 2001. "Who Owns the Sky? Seventh Annual Lloyd K. Garrison Lecture on Environmental Law."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18, pp.227-286.
- Warlenius, R. 2018. "Decolonizing the atmosphere: the climate justice movement on climate debt." *The Journal of Environment & Development*, 27(2), pp.131-155.

보도자료

- 전북일보. 2002.7.27. 2002 환경월드컵을 통하여. <http://kfem.or.kr/?p=61049>(검색일: 2020.12.13).
- 중앙일보. 2017.4.5. "미세먼지가 부른 新시민운동, 엄마들의 반란 '미대축'". <https://news.joins.com/article/21443462>(검색일: 2021.1.27).
- 한국일보. 2017.11.4. "'여의도가 못하면 내가...' 엄마는 정치 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040490716330>(검색일: 2021.1.27).
- UNFCCC. 2020.8.12. "Young people are boosting global climate action." <https://unfccc.int/news/young-people-are-boosting-global-climate-action>(검색일: 2021.1.30).